

# 서울, 정비사업 조기착공 85개구역 공개... 3년간 8.5만호 공급

2028년까지 착공 로드맵 제시  
'신속착공 6종' 패키지 가동  
규제 완화 정부에 지속 건의  
이주비 500억 긴급 용자 지원

서울시가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며,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를 조기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 3년간 85구역서 8.5만호 공급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규모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



Chat GPT로 생성한 서울 도심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중인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선별했으며,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단축 ▲해체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굴토 통합심의 ▲공사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 적용 ▲공사비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검증 선제 시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2027년~) 등이 포함된다.

### ◆ 8만5000호, 연도별 착공 지역은

2026년에는 한남3(용산·5970호), 갈현1(은평·4116호), 중계본동 백사마을(노원·3178호), 방배13(서초·2228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24곳에서 약 3만5000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은평·동작·서초·노원 등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조기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

2027년에는 이문4(동대문·3502호), 노량진1(동작·2992호), 불광5(은평·2387호), 신월곡1(성북·2206호) 등 중대형 정비사업 31곳에서 약 3만40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다수 포함돼 도심과 강남권을 아우르는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개포주공6·7단지(강남·2698호), 상계2(노원·2200호), 미아9-2(강북·1758호), 봉천14(관악·1500호) 등

30곳에서 약 1만6000호가 착공된다. 대규모 단지와 외곽 생활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공급이 분산되도록 구성됐다.

### ◆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용자지원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용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용자는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용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해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교 '역사 콘텐츠 비평' 과목 신설  
암기 중심서 탐구·토론 수업으로 전환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 역사교육 전반의 틀을 손질한다. 아울러 암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탐구·체험·토론 중심으로 전환해, 역사 왜곡·부정에 흔들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된 역사 부정·왜곡 담론이 교실 수업으로 유입되며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장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다원적 관점에서 역사적 쟁점을 탐구·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환경과 교



/유도이미지

육과정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교실 수업의 기준으로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을 확

대하고,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 안내, 2027년 사례집 개발·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시수·구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한다.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주제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선택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30년 새 교육과정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학생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2027년 9종으로 확대하고, 근현대사료·교육자료·체험자료를 묶어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도 2027년 구축한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박세현 제17대 총장 취임

AI·융합교육 기반 대학 체질개선 강조

중앙대학교가 지난 25일 박세현 제17대 총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사진)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세현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2년 임기의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 철학을 '전체가 움직이는 그룹'으로 제시하며 협업과 연계를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다빈치캠퍼스와의 상생 전략을 통해 캠퍼스 간 시너지를 높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박 총장은 '메타 밸류'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워 대학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두산그룹과의 협력을 비롯한 산학 연계를 확대해 산업·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박 총장은 중앙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 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9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교무처장과 BK21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지능형 에너지산업 융합대학원 사업단장, 탄소중립경제연구원장, ESG ICT 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중앙대는 "박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AI·에듀테크 가이드라인 마련

'인간 중심 AI 교육' 원칙 제시  
생성형 AI 안전기준·PPT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인공지능(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을 핵심 원칙으로 한 종합 안내서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

를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공동체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도입편, 활용편, 지원자료로 구성된다. 도입편에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의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 '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범용·교육용 AI 구분, 할루시네이션·과외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초·중·고 발달 단계별 명확한 도입 원칙을 담았다.

활용편은 학교급(초·중·고)과 교육 주

체(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실천 가이드를 제공한다. 모든 활용 과정에 '활용 전(준비)-중(검증)-후(성찰)'의 흐름을 적용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으며, 수업·평가·과제 등 실제 교육 맥락별 권장 사항과 주의 사항, 과정 중심의 학문적 논리를 명확히 안내한다.

지원자료로는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한 각종 서식과 함께, 교사가 별도 제작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사전 교육용 PPT를 제공한다. 또한 sen GPT와 연계한 가이드라인 전용 챗봇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의정부, 교외선 '가능역' 신설 국토부 승인

타당성 검증 후속 절차 돌입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정문 인근에 추진 중인 교외선 '가능역(가칭)'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의정부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3차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법적,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정비됐다는 데 의

미가 있으며, 역사 신설을 위해 예산 확보,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 부지 일대 CRC 개발 등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 시기와 운행 열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관계기관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과 시 예산 반영을 위한 투자심사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